

## 討論文化的 向上

지난 8월 18일 서울대 인구 및 발전문제연구소가 주최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과 지역개발에 관한 공개토론회」는 민주화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토론회」 또는 「토론문화」에 많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강당에서 개최된 이날의 토론회는 개회 벽두 좌장의 인사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초청된 반원전단체 및 원전지역 주민들로부터 제동이 걸려 한 시간 이상 개회가 지연되었다.

주민대표를 자처한 사람들이 마이크를 독점하고 4명이 연이어 발언에 나섰다 때문이었다.

「발표자가 사전에 정해진 토론회는 공개토론회가 아니다. 일방적인 설명회다.」

「정부의 용역을 맡은 대학연구소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중립성이 결여되어 지역주민들이 들을 필요가 없다.」

「청중이 참가하는 자유토론시간을 순서의 마지막에 배정한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방사성폐기물 입지선정에 대한 그 동안의 추진경위를 문서로 제출하라.」

그리고 그들은 구호를 외치며 퇴장하였다. 각 지역에서 밤새워 상경한 1백여명의 지역주민들이 한 시간 가량 토론회를 지연킨 후 토론회를 거부하고 퇴장한 것이다.

민주화시대에는 의사결정 또는 정책결정 과

정에서 찬반토론이 필수적이다. 명칭도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정책연구회... 등등 주최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목적은 찬반의 뜻과 그 이유를 들어 의사(정책) 결정과정(Decision Making Process)에 반영하지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찬반의 토론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과 찬반을 불문하고 상대측 의견을 존중하며 경청하는 자세(마음가짐)이다.

각종 정쟁에 있어 절대찬성이나 100% 지지란 민주국가에서는 존재할 수가 없고, 찬성과 반대토론 등을 통해 최대공약수를 발견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 전체에게 보다 유익한 방향으로 다수의 의견을 모아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찬·반의 자유가 서로 보장되어야 한다. 갑론(甲論)이 싫다고 해서 을론(乙論) 측에서 회의를 방해해서는 안되며,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의사를 발표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회가 충분치 못하다고 생각되면 기회를 요구하거나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찬반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토론회는 성립될 수가 없고 토론문화는 정착되지 못한다.

## 星 雲

다음, 물리적 행동은 배제되어야 한다. 과거 독재시대의 시민정신은 언론을 봉쇄하고 자유 토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일방적 결정을 강행하던 정권에 대해서 그 투쟁방식이 데모, 항거, 의거라는 이름으로 찬양되었지만 민주화시대에 민주화를 하겠다고 서로 약속한 요즘에도 물리적 힘으로 토론회를 원초적으로 저지하겠다는 태도는 내려야할 구습이다. 물리적 힘의 저축이나 배출보다는 자기의 주장을 올바르게 떠나갈 수 있는 이론적 무장과 그 표현에 전력해야 한다.

다음, 「결사찬성」, 「결사반대」라는 표현의 문제이다. 토론문화에서는 결사라는 표현은 토론과정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결사가 전제되는 토론은 이미 토론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 「한·일합방」, 「삼선개헌」 등 국가존망 또는 민주화를 말살하는 문제에 결사불사하던 투쟁방식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 크고 작은 문제해결 방식으로 결사투쟁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대기업의 임금쟁의에서 결사할 일이 무엇이며 도시계획문제를 놓고 도시민 전체가 결사할 일이 무엇인가. 토론문화는 최선 아니면 차선으로 돌파구를 찾는 것에서부터 정착되는 것이다.

다음, 찬성에는 분명한 이유와 그리고 반대

에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찬성이나 지지쪽이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그 일부를 은폐하는 것은 오히려 토론문화에 역행하게 된다. 또한 같은 이유로 반대측에서도 부정 일변도가 아닌 대안제시으로써 문제해결이 모색되어야 한다. 발안(發案)측이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노출시켜 利害 당사자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이며, 이를 은폐하여 후환을 야기시키는 것은 문제를 복잡하게 할 뿐이다.

사회간접자본에 관련된 문제일수록 진실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 선진국 전문가들의 충고이다. 반대측에서는 거시적, 전체적인 입장에서 논리를 전개시켜야 하며, 대안제시로 극한 대립을 회피하는 현명함이 필요하다.

끝으로, 특히 정부가 관계된 정책결정에서 입안측은 IMT(나의 임기중)로 강행하거나 NIMT(나의 임기중에는 하지 않음)로 회피하지 말아야 하며, 반대측에서도 NIMBY(집단 또는 지역이기주의)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민주화교육을 받지 못하고 토론문화에 익숙지 못한 우리국민들이 하루 속히 올바른 토론문화위에서 정부와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여·야가 건전한 정책대결을 하며, 정책결정 과정이 건전하고, 성장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시대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